

2024년 인도 총선 의의와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Tel.044-414-1257)

윤지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Tel.044-414-1327)

백종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044-414-1323)

강반디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dkang@kiep.go.kr, Tel.044-414-1076)

남유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Tel.044-414-1330)



차 례

1. 2024년 인도 총선 개요
2. 총선 의의: 인도의 선택과 전환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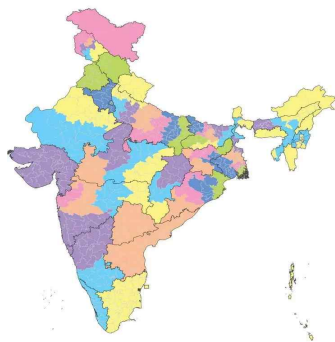
- ▶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인 인도 총선이 2024년 4월 19일~6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2019년 총선에 이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며, '강한 리더'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음.
 - 이번 총선에서 BJP가 2019년에 확보한 303석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BJP는 인도 역사상 '단일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3회 연속 정부를 수립'하는 최초의 정당이 될 것임.
- ▶ 모디 정부는 BJP 이념의 근간인 '통합적 인본주의(integral humanism)'에 기반한 '강한 인도'와 '힌두의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왔음.
 - BJP는 서구 발전 모델을 단순히 도입하기보다 힌두교의 가치를 보존하는 '인도 고유의 발전 모델'을 강조함.
 -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인도를 경제 대국으로 빠르게 부상시키는 한편, 힌두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 현 모디 정부의 국가 개발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 이에 2024년 총선은 모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도 성장 방향성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모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민영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도 국민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전례 없는 자본 투자는 민간투자로 이어져 최근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함.
 -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힌두 중심'적인 정책과 함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배경임.
- ▶ 향후 모디 3기 정부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힌두 국수주의적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차기 정부의 수요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대인도 협력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현대화, 5G 및 6G 통신,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외계층 및 농촌 부문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 한국의 대인도 협력 모델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함.

1. 2024년 인도 총선 개요

■ 인도의 제18대 하원(Lok Sabha)을 구성하는 이번 총선은 4월 19일부터 6주간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6월 4일에 발표될 예정임.

- 이번 총선을 통해 하원 543개 석을 결정하며, 다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연립정당이 총리를 지명함.¹⁾
 - 하원 543석은 28개 주(state)와 8개의 연방직할지(UT: Union Territory)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됨.²⁾
- 총선은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7기에 걸쳐 백만여 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 수는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인 9억 6,900만 명에 달함.

그림 1. 인도의 2024년 총선 투표 일정



구역	순서	일자	실시 지역	의석수
	1기	4월 19일	21개 주/UT	102
	2기	4월 26일	13개 주/UT	89
	3기	5월 7일	12개 주/UT	94
	4기	5월 13일	10개 주/UT	96
	5기	5월 20일	8개 주/UT	49
	6기	5월 25일	7개 주/UT	57
	7기	6월 1일	8개 주/UT	57

주: 7기에 걸친 총의석수가 544개로 합산되나 최종 선출 의석수는 543개임. 북동부 매니푸르(Manipur)의 쿠키 부족(기독교)과 메이테이 공동체(힌두교) 간 폭력 사태 장기화로 Outer Manipur 1개 의석을 놓고 2차(phase)에 걸친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중복으로 합산됨(매니푸르는 Inner Manipur와 Outer Manipur에서 각 1석씩 선출할 예정).

자료: The Hindu Business Line(2024. 3. 16.), "General Elections 2024: Voting to begin from April 19 in 7 phases: Results in June 4" 등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와 시킴(Sikkim)은 4월 19일,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는 5월 13일, 오디샤(Odisha)는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임.

■ 야당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3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인도는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이하 'NDA')과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또는 Congress, 이하 'INC')가 이끄는 연합정당간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다당체제를 구성하고 있음.³⁾

1)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하원을 구성하는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함.

2) 주(state)는 중앙정부로부터 입법 및 행정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총리(chief minister)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갖는 반면, 연방직할지(UT)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모든 입법 및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됨. 8개의 연방직할지 가운데 델리와 푸두체리(Puducherry),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에는 독립적인 입법부가 있음.

3) 인도에는 BJP와 INC를 비롯한 6개의 전국정당(national party)과 56개의 지역정당(state party), 그리고 2,600여 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함. 단독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려워 연립정당을 형성함.

- 총선을 앞두고 2023년 7월, INC를 비롯한 26개의 정당이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 이하 'INDIA')⁴⁾을 결성하였으나, 지역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당 갈등 등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어 모디 총리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임.
 - INC가 서벵골(West Bengal) 등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까지 후보를 내세우면서 지역정당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INDIA 창립 멤버이자 비하르(Bihar) 주총리인 니티시 쿠마르(Nitish Kumar)가 NDA로 전향하면서 결속력이 약화됨.⁵⁾

표 1. 인도 정당체제

구분		국민민주연맹(NDA)	인도국민개발포괄연맹(INDIA, 舊UPA)
최대 정당		인도국민당(BJP)	인도국민회의(INC)
소속 정당		Shiv Sena, JD(U), TDP 등	DMK, CPI(M), IUML, JKNC 등
하원 의석수	2019	353/543(BJP 303석)	91/543(INC 52석)
	2014	336/543(BJP 282석)	59/543(INC 44석)
상원 의석수		119/245(BJP 97석)	74/245(INC 29석)
집권 주/UT		18/31(BJP 12개)	9/31(INC 3개)
정치성향		우파/힌두민족주의	중도좌파

주: 6개의 전국정당 가운데 BSP(Bahujan Samaj Party)는 독립 노선을 선택.

자료: 인도 국회 홈페이지(<https://sansad.in/poi>, 검색일: 2024. 4. 15.)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총선에 앞서 2023년 11월 진행된 5개 지역의 주의회 선거 결과, BJP가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는 물론 INC가 집권했던 라자스탄(Rajasthan)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에서까지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이어서 지난 2월 말 15개 주에서 치러진 상원(Rajya Sabha) 선거에서 56석 가운데 BJP가 30석을 차지함으로써 상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⁶⁾
-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BJP가 370석, NDA가 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NDA가 최소 335개, 최대 411개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⁷⁾

■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위대한 정치인'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세 번째 임기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모디노믹스(Modinomics)'를 토대로 인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으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 세계 최초의 달 남극 착륙 등의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함.

4) 舊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인디아 블록이라고도 함.

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4. 4. 2.), "India's 2024 General Election: What to know," <https://www.cfr.org/expert-brief/indias-2024-general-election-what-know>(검색일: 2024. 4. 5.).

6) The Indian Express(2024. 3. 1.), "Rajya Sabha elections: After BJP's wins, what is the party-wise composition of the Upper House?" 인도의 의회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원은 총 245명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주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233명은 선출, 12명은 대통령 지명)되며, 6년 임기로 2년마다 1/3씩 교체됨. 2024년 3월 기준 5석 공석.

7) 2024년 실시된 여덟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종합.

-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빈부격차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농민 부채 증가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더해 힌두 극단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경우 인도의 세속주의 전통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⁸⁾
- 총선을 앞두고 3월 11일에 발표된 「시민권개정법(CAA: Citizenship Amendment Act)」⁹⁾의 본격화는 힌두 교도(인도 인구의 80%)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2024년 총선과 모디 정부 3기 출범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전망과 함께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2. 총선 의의: 인도의 선택과 전환

- 인도는 거대 소비시장과 정보기술(IT) 발달,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인프라 미비, 종교적 갈등, 복잡한 정부 규제와 같은 요인으로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지속 제기되어왔음.
- 1991년에 단행한 경제개혁을 필두로 인도정부는 산업면허제도인 라이선스 라즈(License Raj)를 철폐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000년대 IT 부문의 급성장으로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 과정에서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높은 교육열을 가진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소비 문화도 형성되고 있으며,¹⁰⁾ 인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은 인도 GDP의 20% 미만으로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GDP 50% 이상)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그림 2).
 - 그러나 인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과 농업 부문의 불안정, 인프라 및 제조업의 미약한 발전, 교육 및 보건 시스템 미비를 포함한 여러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일자리 부족, 물가상승 등의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9%에 육박(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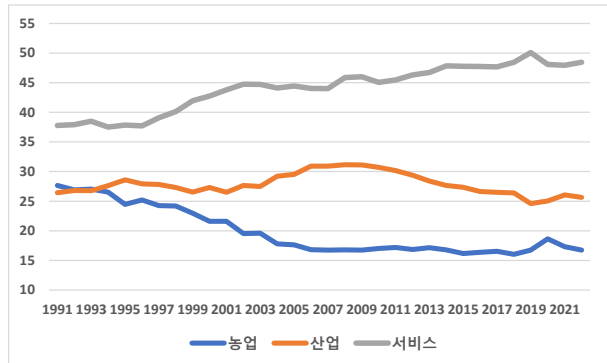
8) 나렌드라 모디는 힌두 근본주의 단체 인도국민의용단(RSS)과 이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 BJP에 합류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짐.

9)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도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의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기독교, 불교, 파르시교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무슬림을 배제하고 있어 반무슬림법으로 논란이 되었음.

10) Sara Dickey(2012) 교수는 논문 "The Pleasures and Anxieties of Being in the Middle: Emerging Middle-Class Identities in Urban South India"를 통해 경제개혁 이후 많은 인도인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중산층에 속한다고 느끼며, 그 이유로 자동차, TV 등 기존과 다른 형태의 소비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함. 아울러 중산층은 지역 내 상층 카스트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음.

그림 2. 인도 산업별 GDP 내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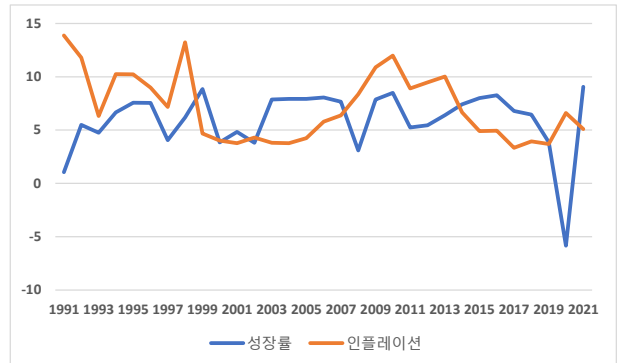


주: 산업 부문에 건설업 포함.

자료: World Bank Data(검색일: 2024. 4. 5.).

그림 3. 인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World Bank Data(검색일: 2024. 4. 5.).

■ 201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역임 기간 △인프라 확충, △제조업 강화, △해외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을 인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변화를 열망하는 인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한 바 있음.

-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수립하고 산업 인프라 개선, 비즈니스 혁신, 기술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¹¹⁾ 주총리를 역임한 2001년 10월~2013년 기간에 구자라트는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21/22년 기준 구자라트의 경제 규모는 13조 7,220억 루피(약 1,647억 달러)로 마하라슈트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제조업 비중은 36.7%에 달함.¹²⁾
- 2014년 총선에서 발표한 ‘제조업 장려를 통해 향후 10년간 2억 5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무엇보다 경제적 발전과 인도를 변화시킬 강한 리더를 열망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¹³⁾ 단일 정당으로서 과반인 282석을 확보함.
- 2019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 공습에서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 소득세 공제한도 상향 등 시혜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303석을 확보함.¹⁴⁾

■ 모디 정부는 BJP 이념의 근간인 ‘통합적 인본주의(integral humanism)’에 기반한 ‘강한 인도’와 ‘힌두의 인도’를 추진하고 있음.¹⁵⁾

- ‘통합적 인본주의(Integral Humanism)’는 개인을 가족, 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유기체로 보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복지 간 균형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구의 발전 모델을 단순히 도입하기보다는 ‘인도 고유의 발전 모델’을 개발할 것을 강조함.¹⁶⁾

11) 최윤정(2014),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KIEP 지역경제 포커스, p. 4.

12) 2011/12년 기준, 인도 중앙은행 Handbook of Statistics on Indian States, <https://www.rbi.org.in/scripts/PublicationsView.aspx?id=22092>.

13) 김찬완(2019), 「인도 정치의 대전환: 2019년 총선을 중심으로」, p. 19.

14) 한형민, 김정근, 송영철, 김도연(2019),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의 의의와 경제정책 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 BJP 정당 홈페이지, <https://www.bjp.org/philosophy>; Wire(2024. 1. 30.), “What Does ‘Integral Humanism’ Really Mean to the BJP?”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사회평등을 바탕으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켜 개인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함.
-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인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힌두교를 부흥’시키는 것이 모디 정부의 국가 개발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BJP는 ‘Bharat Mata ki Jai(우리의 땅과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가 궁극적으로 인도 내에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이에 BJP는 자와하랄 네루 초대 총리 및 그 가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국민회의(INC)가 서구적 세속주의를 단순 차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강한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모디 정부는 2014년 제조업 강화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다양한 개혁을 추진함.

-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9월에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까지 확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
- 모디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선순환적 고성장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신뢰감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인도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함.¹⁷⁾

그림 4.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선순환 고성장 메커니즘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



자료: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p. 37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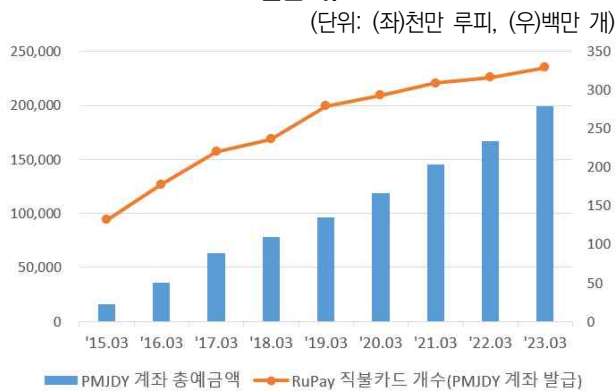
- [2014년] 전국민계좌정책(PMJDY)을 도입해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함.
- PMJDY 정책은 제도권 금융 및 복지 시스템의 확산과 정착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이 정책의 수혜를 본 것으로 평가¹⁸⁾

16) BJP의 전신인 Jan Sangh의 수장 Pandit Deen Dayal Upadhyaya는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의 국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개인과 같아서 본능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병든다고 강조함. 아울러 독립은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때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함. 출처 상동.

17)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pp. 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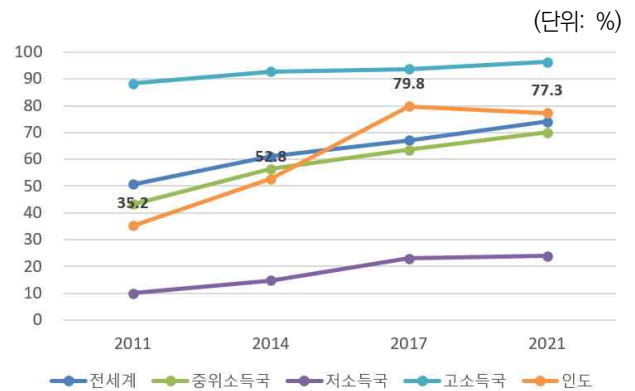
- 정책 시행 후 9년간(2014년 8월~2023년 8월) 5천만 명 이상이 제도 금융권(은행)에 신규 유입되었으며, PMJDY 정책으로 신규 개설된 예금 총잔액은 2023년 3월 기준 238억 달러, RuPay¹⁹⁾ 직불카드 발급 건수 3억 3,000개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금융계좌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짐(그림 5, 그림 6).
- [2015년] 인도 「파산법(The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개정으로 비즈니스 환경 및 대 인도 투자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됨.
- 기존의 복잡·다단했던 파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파산회복 소요 기간(Time to resolve insolvency)’이 4.3년에서 1.6년으로 감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그림 7).

그림 5. PMJDY 예금잔액 및 RuPay 직불카드
발급 규모



자료: Ministry of Finance(검색일: 2024. 4.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15세 이상 국민의 금융기관 계좌보유 비율



주: 1) 각 그룹의 평균치 기준.

2) 2020년 기준 고소득국은 1인당 GNI 12,696USD 이상, 중위 소득국은 1,046~12,695USD, 저소득국은 1,045USD 이하.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4. 4.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6년] 통화폐기(Demonetisation) 시행으로 인도 화폐경제 정비를 추진함.
- 블랙머니(Black Money) 및 지하금융을 단기간 내 일소하기 위해 시중 통화의 86%에 달하는 500루피 및 1,000루피 화폐를 단기 내 폐기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확산²⁰⁾
- [2017년]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을 통한 조세체계를 개혁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
- 주(州)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포괄적·일괄적인 간접세 징수체제로 통일하였으며, 상품서비스세(GST) 세수는 2018년 1,360억 달러에서 2023년 2,350억 달러로 증가(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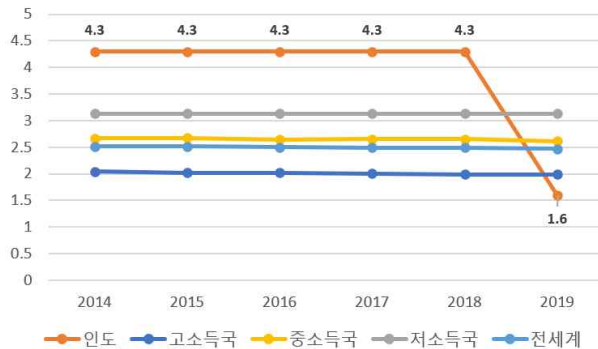
18) Ministry of Finance, “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 (PMJDY) - National Mission for Financial Inclusion, completes nine year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https://pib.gov.in/PressReleaseFramePage.aspx?PRID=1952793>(검색일: 2024. 4. 5.).

19) RuPay는 인도중앙은행(RBI)과 국립결제공사(NPCI) 주도로 도입된 인도의 금융결제 시스템임.

20) PwC, “Demonetisation effect: Digital payments gain new momentum,” <https://www.pwc.in/industries/financial-services/fintech/fintech-insights/demonetisation-effect-digital-payment-gain-new-momentum.html>(검색일: 2024. 4. 5.).

그림 7. 파산회복 소요 기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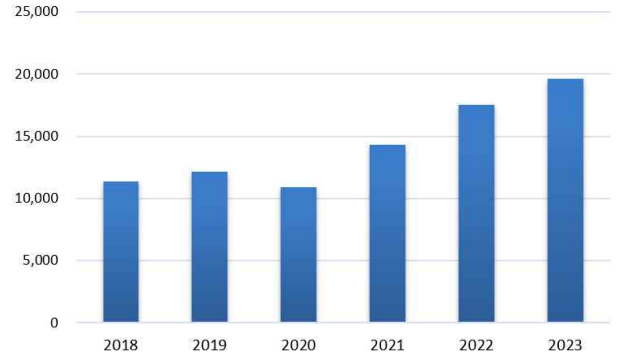


주: 1) 각 그룹의 평균치 기준.
2) 2020년 기준 고소득국은 1인당 GNI 12,696USD 이상, 중위소득국은 1,046~12,695USD, 저소득국은 1,045USD 이하.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4. 4.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상품서비스세(GST) 세수

(단위: 십억 루피)



자료: Ministry of Finance(검색일: 2024. 4.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공공건강보험(PM-JAY)²¹⁾을 통한 보다 포괄적이고 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
 - 누적 61억 건의 건강보험 청구 및 93억 달러의 건강보험 지출을 기록하였고, 총수혜대상자는 5억 5천만 명에 달하며(23. 12. 기준, 인도 내 7만 7,000여 개의 건강·복지 센터(AB-HWC)를 운영 중(21. 7. 기준, 향후 15만 개 목표)²²⁾
- [2019년] 농민 소득보전 제도(PM-KISAN) 시행을 통해 인도정부는 농민 재정지원 정책을 운용하여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개선함.
 - 연간 6,000루피의 직접 보조금을 4개월 단위로 농가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유동성을 확보 하였으며, 저소득층 빈곤 문제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²³⁾²⁴⁾
- [2020년] 인도정부는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고,²⁵⁾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연계 인센티브(PLI)를 시행함.
 - 기존의 복잡했던 제도를 △소득세 환급, △표준공제 혜택 확대, △최고 가산율 인하, △퇴직 근로자 세금 제도를 중심으로 개편해²⁶⁾소득별 세율 구조를 변경하고 세금 환급 한도를 70만 루피로 확대
 - PLI 제도는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 선정된 기업이 생산 및 투자를 포함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인도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도정부는 2조 8,000억 루피를 지원할 계획²⁷⁾

21) 모디 정부의 공공건강보험 정책인 PM-JAY(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는 '총리(Pradhan Mantri)가 추진하는 국민 의료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됨.

22)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Ayushman Bharat 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AB-PMJAY),"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38169>(검색일: 2024. 4. 5.).

2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Giving the multiplier effect to PM-Kisan, India's direct benefit transfer program for farmers."

24) Ministry of Agriculture & Farmers Welfare, "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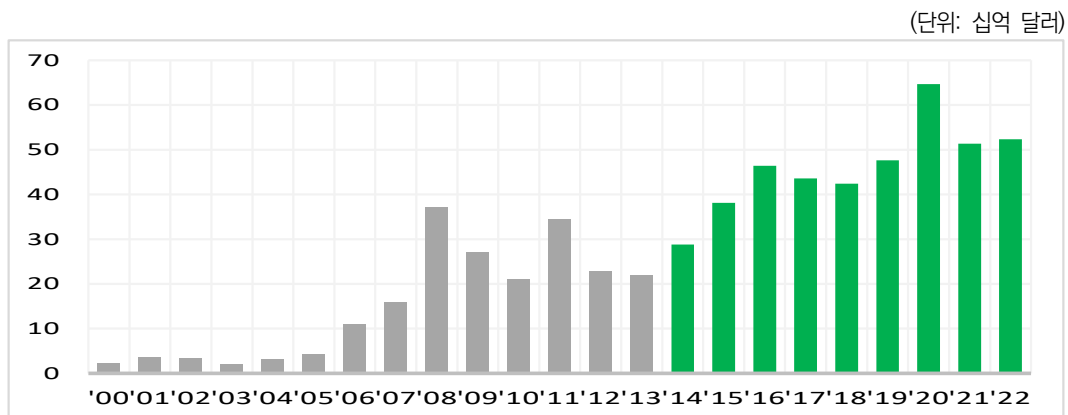
25) Ministry of Finance, "MAJOR ANNOUNCEMENTS IN PERSONAL INCOME TAX TO SUBSTANTIALLY BENEFIT THE MIDDLE CLASS."

26) Mint, "Income Tax: Old tax regime vs new tax regime and how to switch between the two? MintGenie explains."

27) 김경훈(2022),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12.

- [2021년] 인도 내 경제구역을 연결하고 제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PM Gati Shakti를 발표함.
 - △인프라 통합, △제조업 클러스터 개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2026~27년까지 인도경제를 5조 달러 규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²⁸⁾
 - 인도정부는 16개의 중앙 부처 및 인프라 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포털을 마련하고²⁹⁾ 항공 인프라 구축전략(UDAN), 도로 인프라 개발전략(Bharatmala), 항만 인프라 개발전략(Sagarmala) 등 주요한 인프라 개발전략은 PM Gati shakti를 통해 실행하고 있음.
- 아울러 모디 정부는 지난 10년간 거의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 규제를 적극 완화했으며,³⁰⁾ 2014~22년 대인도 FDI 투자액은 4,15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00~22년까지 대인도 FDI 유입액(6,258억 달러)의 약 66%가 모디 정부 이후 유입됨.
 - 매년 개혁을 추진하여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순위는 2015년 142위에서 2020년 63위로 79단계 상승함.³¹⁾

그림 9. 대인도 FDI 투자액 유입 추이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데이터(검색일: 2024. 4. 16.).

- 이에 2024년 총선은 모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도의 성장 모델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 75주년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인도'로 발전할 황금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담은 'Amrit Kaal'을 발표함.
 - 황금시대 기간 동안 △경제성장, △시민의 생활 여건 향상, △인프라 및 기술 발전, △인도의 국가적 신뢰 향상을 통해 식민지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인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 인도를 구현하고자 함.³²⁾

28)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PM Gati Shakti National Masterplan to help achieve India's aim of USD 5 Trillion economy, says Shri Som Parkash."

29) Business Standard, "PM Gati Shakti Master Plan: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is project."

30) 복권사업,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업, 원자력, 부동산업 일부, 철도 운영, 담배 및 담배 제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FDI를 허용함.

31)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https://archive.doingbusiness.org/en/rankings>.

32) Invest India, "New India in Amrit Kaal."

- 2023/24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인도정부는 여성, 농민, 하층 카스트, 북동부 지역 주민 등 소외 계층 복지를 향상하고, 10조 루피의 예산을 할당해 인프라 확충과 그린에너지 개발 추진 및 신산업 훈련 지원을 포함한 청소년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 발표함.³³⁾
- 아울러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7년에는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대국(세계 3위)으로 성장시키고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진 인도(Viksit Bharat)’ 비전을 발표함.³⁴⁾
- Viksit Bharat은 모든 시민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도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특히 인도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재능과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20년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³⁵⁾

3. 전망 및 시사점

■ 모디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최근 미·중 경쟁 구도에 따른 인도의 위상과 전략적 중요도가 더욱 확대되면서 모디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BJP는 이번 총선에서도 단독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모디 총리는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며, ‘강한 리더이자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함.³⁶⁾
- 인도경제는 최근 3분기 연속 8% 이상의 성장률(2023/24년 Q1 8.2%, Q2 8.1%, Q3 8.4%)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주가지수인 센섹스(Sensex) 지수는 4월 9일 기준 사상 최고치인 7만 4,244포인트를 기록함.
- 2014년 공약으로 발표했던 람 사원(Ram mandir)³⁷⁾ 봉헌식(2024년 1월)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국교인 UAE 내 힌두 사원 개소식(2024년 2월)에 참석해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인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집결하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Ipso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모디 총리에 대한 인도국민의 지지도는 지난 9월보다 10%p 오른 75%를 기록했으며, 특히 힌디 벨트(Hindi Belt)가 위치한 북부 지역의 지지도는 9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음.³⁸⁾
- 동부의 서벵갈 및 남부의 오디샤, 타밀나두에서 BJP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NDA가 4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33) The Economic Times, “Saptarishi to guide nation in Amrit Kaal: Nirmala Sitharaman.”

34) 선진 인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선 이후 발표될 예정임.

35) 교육정책은 전국의 대학을 연구기관과 연계 혹은 합병을 포함해 숙련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Viksit Bharat 캠페인을 청소년 축제와 대학에도 장려하고 있음. Government of India, “Ideas for the Vision Viksit Bharat@2047.”

36) Foreign Policy(2024. 4. 8.), “The New Idea of India.”

37)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아요디아에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라는 모스크를 철거하고 새로 세운 힌두 사원으로, 일부 힌두교 관계자는 모스크의 위치가 힌두 신 라마의 출생지라고 주장하였음. Britannica, “Ram Mandir, Ayodhya.”

38) Ipsos(2024. 3. 6.), “Approval Rating of PM Narendra Modi soars to 75% in Feb 2024 – a 10% jump from Sept 2023 wave: Ipsos IndiaBus Survey.”

■ 인도국민의 모디 정부에 대한 지지는 힌두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민영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도국민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경험하고 있음.
 - 민간부문이 인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할당제) 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정부의 거버넌스, 인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
- BJP는 “Acche din aane waale hain(좋은 날이 오고 있다)”, “Sabka Saath, Sabka Vikas(모든 인도인이 노력한다면 다함께 발전할 것이다)”와 같은 슬로건을 활용하면서 번영, 기회, 더 나은 생활을 실현하는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로, 전기, 철도 인프라 등을 확충했고,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민간투자자 이어져 최근 인도경제는 건설, 금융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³⁹⁾
- 반면 인도 독립 이후 최장기간 정부를 수립했던 인도국민회의당(INC)의 영향력이 사실상 지역정당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INC가 주장하는 세속주의, 분배 중심의 공약이 인도 유권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부록 1).
 - INC는 모디 총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유층의 이익을 옹호했다며, 독재를 견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함. ‘INC= 간디 가문’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지 못한다면 INC는 인도 내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기 쉽지 않아 보임.⁴⁰⁾

■ 이에 모디 3기 정부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힌두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메이크 인 인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전기차), 그린에너지, 제약 등 최근 인도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 제조업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를 가속할 것으로 보임.⁴¹⁾
 - 2022년 2월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한 모디 총리는 ‘민주주의’, ‘정치적 안정’, ‘생산적인 정책’,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어야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인도가 모든 조건을 갖춘 국가”라고 강조함.⁴²⁾
 - 해외 투자자에게 인도가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국가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총선 이후 대인도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힌두교를 믿는 중산층⁴³⁾과 상층 카스트 계층은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경제적 발전 기회를 더 많이

39) 인도정부는 2023/24년 예산안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루피를 자본투자 부문에 할당함. 건설업 부문의 성장률은 2023/24년 Q1, Q2, Q3 각각 8.5%, 13.5%, 9.5%로 산업부문 중 가장 높았으며,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의 성장률도 최근 3분기 평균 8.5%를 기록함. https://www.mospi.gov.in/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PressNote_onGDP_SAE_Q3_FRE_SRE_TRE01032024.pdf(검색일: 2024. 4. 15.). 인도의 정치연구기관인 Lokniti가 2019년 총선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절반 이상(50.5%)은 ‘모디 정부가 추진한 개발이 모든 인도인을 위해서였다’고 응답함. Lokniti, “All India Postpoll NES 2019-Survey Findings.”

40) 소니아 간디는 1998~2017년까지 당대표를 역임했고 이후 그의 아들인 라홀 간디가 2017~19년 당대표를 맡았으나, 총선 실패 등을 쇄신하고자 소니아 간디가 당대표를 재역임함. 2022년부터 남부 지역 출신인 말리카르준 카르지(Mallikarjun Kharge)가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41) 김경훈(2022),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42) India Today(2022. 2. 8.), “emocracy, demography, decisiveness, demand: PM Modi’s 4-D mantra for growth.”

43) 인도소비자경제연구소(PRICE)는 중산층을 ‘가구당 연 50만~300만 루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개인당 하루 298루피에서 1,779루피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힌두 문화를 더욱 지지할 것으로 보임.

- 모디 정부도 두터워지는 인도의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 소도시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 확대, 주거 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을 포함한 중산층 맞춤형 공약을 발표함.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힌두교인 중에서는 ‘진정한 인도인이 되기 위해서 힌두교를 믿어야 한다’는 응답이 64%, ‘힌두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59%로 나타났으나, 무슬림교인 중에서는 27%만이 ‘힌두교를 믿어야 한다’고 응답함.⁴⁴⁾

■ 한편 일각에서는 무슬림 차별적인 정책을 비롯해 모디 정부가 인도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인도경제의 실체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나, 이번 총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2002년 구자라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힌두와 무슬림 간의 갈등이 커다란 인명 피해로 이어졌으며, 북인도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 사태가 계속 보도되는 상황으로, 사회갈등 봉합은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공존하는 인도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임.⁴⁵⁾
- 다음 정권 수립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인도의 높은 실업률 문제에는 농업 불안정, 도시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인도의 실업률은 각각 7.3%, 8.0%로 코로나 19 대유행 전인 2018년의 5.3%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⁴⁶⁾

■ 차기 인도정부의 수요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대인도 협력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중심으로 보조금 등 투자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무역·투자 잠재력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2024 BJP 공약집⁴⁷⁾을 통해 모디 정부는 제조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실업 및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조선, 방산, 반도체, 전기차 및 충전소,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보임.
- 모디 3기 정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정부는 ODA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교통, 5G 및 6G 통신 네트워크 확장, 그린에너지, 식품 가공업 등 인도 내 인프라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바는 개인’으로 정의했으며, 2030년에는 인도 전체 인구의 47%가 중산층에 속할 것으로 예상함. The Indian Express(2024. 3. 30.), “Educated voters usually disdain populist leaders, but not in case of Modi: Report.”

44) Pew Research Center(2021. 7. 20.), “For most of India’s Hindu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ies are closely linked.”

45) 인도의 인간자유지수는 2015년 6.93에서 2023년 6.29로 하락했으며, 동 기간 세계 순위는 75위에서 109위까지 떨어짐. The Mirrority, “Human Freedom Index,” <https://www.themirrority.com/data/human-freedom-index>.

46) 반면 인도정부는 2022/23년 실업률을 3.2%로 발표함(농촌 2.4%, 도시 5.4%). CMIE(2024. 3. 1.), “Unemployment rate rises to 8% in February 2024.”

47) BJP, “Manifesto 2024(Modi ki guarantee),” <https://www.bjp.org/manifesto>.

- BJP는 기존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더불어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국경 주변 인프라 및 철도와 초고속 열차 네트워크 확장계획, 신공항 건설, 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고, 농업 디지털 공공인프라 구축, 디지털 상거래를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토지기록 디지털화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 한편 인도가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일자리 및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관 산업의 법률과 규제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
- 인도는 여성, 농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농가 및 농촌지역 인프라 개발, 청소년 및 여성 복지 향상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 한국의 대인도 협력 모델을 차별화해야 함.⁴⁸⁾
- 아울러 지속적인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임.
- 인도와 한국은 2015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나 일본,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국 대비 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 인도는 주별로 언어를 포함한 문화가 상이하고 산업과 투자 제도도 중앙정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인도를 하나의 국가보다는 대륙이라는 관점으로 주정부의 개발계획을 살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신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KIEP**

48) 여성, 농민, 소외 계층은 인도 전체 유권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모디 정부는 가정용 가스요금 할인, 농가 화장실 보급 등의 복지제도 외에 8억 명을 대상으로 5년간 무료 식량을 제공하는 국민식량안정제도(PMGKAY)를 발표하고 2024년 1월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함.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2023. 11. 29.), “Free Foodgrains for 81.35 crore beneficiaries for five years: Cabinet Decision.”

부록 1. 2024년 인도 총선의 주요 정당별 공약

구분	인도국민당(BJP)	인도국민회의(INC)
중점 분야	- '선진 인도'를 위한 4개 기둥 (청년, 여성, 빈민, 농민)	- '정의'의 5개 기둥 (청년, 여성, 농민, 노동자, 공정성)
인프라 개발	-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과의 국경에 인프라 개발 - 인도 북부, 남부, 동부에 초고속 열차 건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현대화 -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	- 국제협력, 인프라 개발, 법률 간소화를 통한 수출 확대 - 글로벌 제조허브 구축 및 고용 확대	- 산업, 비즈니스, 무역 분야의 정부 통제 탈피와 자유로운 기업환경 구축 - GDP 내 제조업 비중 20%까지 확대
농민	- 연간 6,000루피 지원 지속 - 농작물 최저지원가격(MSP) 인상 - 저장 및 판매 시설 등 농업 인프라 구축	- 농작물 최저지원가격(MSP) 법적보장 - 농민 대출 면제 -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면제
여성	- IT, 관광, 교육, 의료, 소매업, 농업 분야의 교육역량 강화 - 여성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 - 노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호스텔, 탁아소 구축 - 의료 서비스 확대	- 빈곤가정 여성에게 연간 10만 루피 현금 지원 - 2025년부터 중앙정부 일자리의 50%를 여성에게 할당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시행 - 법률 내 성차별 조항 수정·삭제
빈민	- 전국 최저임금 수시 검토 - 향후 5년간 무료 배급 지속 - 최대 50만 루피의 무료 의료 서비스 지속 제공 - 전기 무료 공급	- 하루 400루피의 최저임금 보장 - 무료 의료 서비스 지급 한도 250만 루피로 인상 - 빈곤가정에 연간 10만 루피 지급 - 일자리와 교육기관에 경제적 취약계층 10% 할당제 시행
청년	- 스타트업 자금 및 멘토링 지원 -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고용 확대	- 300만 정부 공석 충원 - 25세 미만 청년 견습직에게 10만 루피 지원
종교/인권	- 「시민권개정법(CAA)」 시행 - 통일 민법(Uniform Civil Code) 도입	-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와 신앙 존중 - 소수민족 및 성소수자 권리 보장 - 전국적 카스트 사회경제조사를 통한 차별 철폐 의제 강화
대외정책	- 2036년 올림픽 유치 - 세계 경제 3위 국가로 도약	- 잠무와 카슈미르의 완전한 주(州) 지위 회복 - 10년 내 GDP 두 배 달성

자료: 정당별 선거공약집 및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